핵폭탄급 블랙홀, 대선도 비선 의혹도 다 집어 삼키나

정치권 요동

1년 2개월앞 대선구도 뿌리째 흔들
야권 "논의는 하되 대통령 빠져라"
수세 몰린 여권 일거양득 효과
정치권 재편 제3지대론 힘 받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임기를 약 1년 4개월,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 2개월 남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깜짝 개헌 카드'는 향후 대선 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핵폭탄급 이슈여서 대선 정국도 격랑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요구해 온 목소리가 다수였고 국민 여론도 개헌에 우호적인 편이어서 박 대통령의 제안은 일단 논의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피해가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야당이 무작정 이를 반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헌의 명분과 함께 정부에 개헌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커졌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두 야당은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다소 당황한 기류 속에서 개헌 정국을 돌파할 전략 마련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 전체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미 개헌 정국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에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일단 대선에 개헌 정국이 겹치면서 지금까지의 대선 전략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집권 전략을 급선회해야 하고 대선 주자들도 지금까지 위상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혼란 정국에서 제3지대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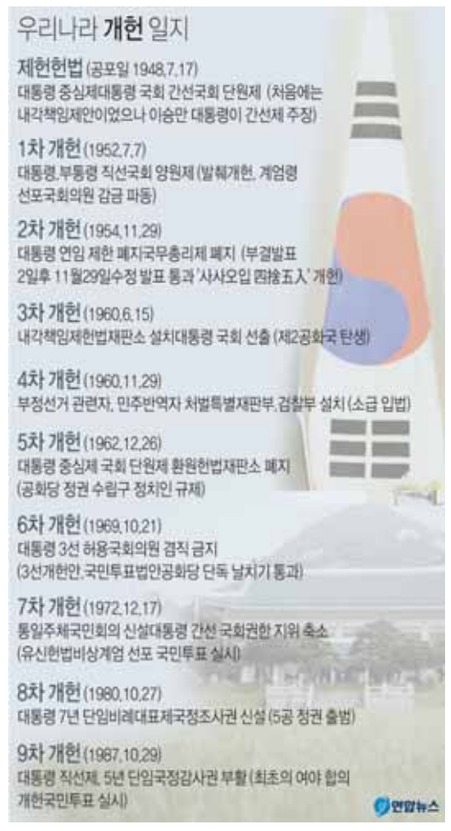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정국이 부담스럽다. 대통령이 반대하던 시기에는 정부·여당을 흔들 거대 이슈 중 하나로 개헌 카드만큼 유효한 게 없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개헌 정국에 기선을 잡고 야당이 뒤따라가는 상황에 처하며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물론 '최순실·우병우 의혹'을 고리로 한 여권에 대한 공격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각종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내심 정국을 반전시킬 절호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여기에 야권을 개헌론자와 반(反)개헌론자를 갈라놓을 경우 여권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야말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권에는 당장 위기를 극복할 카드를 가짐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으나 '비선 실세 의혹'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상태는 아니어서 개헌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개헌을 정치권이 주도할 경우 박 대통령에게는 확실한 '레임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개헌이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헌안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더라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채 '말 잔치'로만 끝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순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 뒷편으로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나와라 최순실'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민·네티즌 반응

"임기내 실현 불가능…시기·진정성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임기 내 개헌 제안에 대해 지역 각계에서는 찬반과 시기상조론 등 의견이 엇갈렸다. 개헌 제안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탓에 진정성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개헌이라는 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최순실 의혹' 관련, 정국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평가했다.

공 교수는 또 "개헌은 물리적으로 시간상 가능한 방법이 하나도 없다. 모든 관련자들이 100인 100색인데 합의라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의회에서도 불가능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시민 정승현(40·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개헌 발언과 관련, 4년 중임제라면 찬성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최순실·우병우·차은택 등 현 정부의 게이트를 덮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개헌 발언을 했을 땐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87년 체제 극복과 지역분권·균형발전·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원론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더라도 이번 개헌론이 조기 레임덕에 빠진 정권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쇼'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키는 블랙홀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NS에서도 개헌 찬반론이 뜨거웠다. 네이버 아이디 'angi＊＊＊＊'는 "개헌 지지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현안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위한 개헌도 필요합니다"라고 찬성했다.

반면 다음 아이디 '독수리3호'는 "개헌을 준비할 거면 임기 초부터 했어야지. 내년이 대선인데 언제 준비하고 언제 통과할거냐. 국민의 공감대와 국회뿐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되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음 아이디 '선비'는 "임기 얼마나 남았다고. 괜히 손대지 말고 다음 정권에서 신중하게 합시다"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5년 단임제 한계? 임기말 난국 돌파용?

반대하던 개헌카드 왜 꺼냈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에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에서 '깜짝 카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야의 개헌 요구에 응하지 않던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정치권이 5년 단위의 '대선 시계'에 맞춰 이전투구의 정쟁을 반복하는 구조적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만을 바라보는 여야의 무한 정쟁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정권 교체 시 정책의 연속성도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인식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됐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을 개헌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노림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야권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국면전환용이자 차기 대선을 겨냥한 다목적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여야 대권주자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 상당수가 개헌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청와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헌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혼란 적은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 논의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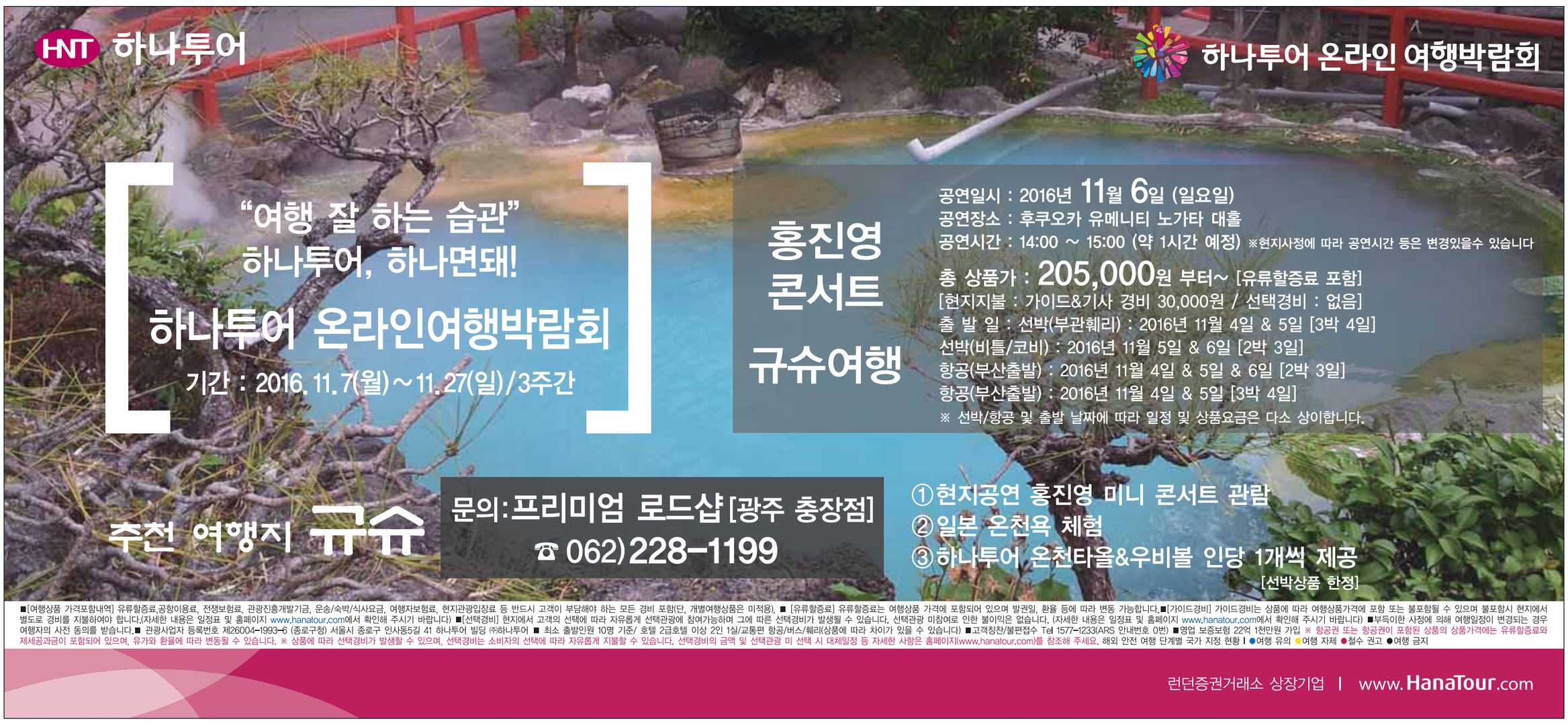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개헌 추진 제안으로 1987년 헌법 체제가 대변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인 9차 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를 선택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달라진 정치·사회·경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개헌 요구가 계속 분출돼 왔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 방식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꼽히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화의 폭이 가장 적고 레임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론되는 제도다. 하지만, 첫 임기 때 지나치게 재선을 염두에 둔 국정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맡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으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여권 주류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뽑는 방식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상적인 제도로 꼽지만 현실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따른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화의 폭이 비교적 적은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지만 내년 대선정국이 개헌경쟁 구도로 흐르게 되면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급진적 개헌론이 전면에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